

“  
최소한 국제기준에는  
모자라지 않게  
”

노동삼권을 제한당하는  
소수노조 조합원, 파업노동자,  
비정규직, 방위산업체 노동자의  
절실하고 답답한 마음을 모아  
정부와 국회에 전달합니다.

생산과 창조의 금속노동자,  
잘못된 노동법 제도를  
제대로 고치고 만듭시다.  
단체교섭, 노조 가입·설립,  
노조 활동의 방해물을 없앱니다.

ILO핵심협약 이행  
노동법 개정 촉구  
금속노조  
서명운동



# 노동법 개정하고 2024 임단투 승리 7월 총파업으로!



## 6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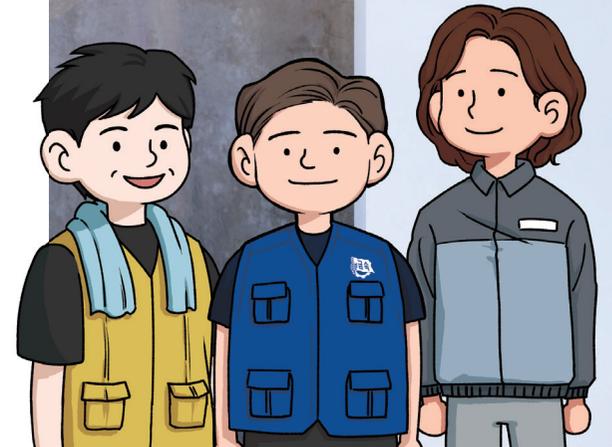
- 30일까지 노동법 개정 촉구 금속노조 서명운동
- 10일부터 '7월 총파업 조직' 임원 현장 순회
- 12일(수) 금속노조 1만 간부 결의대회 (14시 국회 앞)
- 22일(토) 모든 노동자의 임금 인상·노동권 쟁취!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 (14:30 서울)
- 26일(수) 산재처리 지연 규탄! 근본 대책 수립 촉구  
금속노조 결의대회 (14시 울산 근로복지공단 본부)

## 7월

- 10일(수) ILO 핵심협약 이행! 노조법 2·3조 개정!  
타임오프 철폐! 윤석열 정권 퇴진!  
2024 임단투 승리! 금속노조 1차 총파업
- 18일(목) 금속노조 2차 총파업 (중앙교섭 미타결 시)

2024년 6월  
금속노조는

노동법 제도를  
ILO핵심협약  
국제기준으로  
끌어올립니다





**한국은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 보장(87호)  
단결권과 단체교섭권(98호) 등  
국제노동기구 ILO 핵심 협약 비준 국가!**

그러나 ILO 협약과 부딪히는  
국내 노동법·제도들이 있습니다.  
ILO 협약 권고적용 전문가위원회가  
한국 정부에 '노조 활동 부당 개입'  
노동법의 개선을 요청 중입니다.

ILO 협약은 국제 노동표준!  
보편적인 기준에도 못 미쳐  
없애거나 개정해야 할  
대표적인 노동법·제도 5가지,  
같이 살펴볼까요?



**교섭창구 단일화 폐기**



ILO는 한국 정부에 “기업 단위 교섭에서 배제된 노동자를 위해 초기업적 단체교섭을 촉진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교섭창구 단일화제도 폐기와 함께 △산별교섭 제도화 △산별협약 효력확장 △사용자의 산별교섭 응낙의 무 강화 △단협 체결 대상 확대 등이 필요합니다.

**방산노동자 쟁의권 보장**



ILO는 “경찰, 군대가 아닌 민간 영역으로 쟁의권 제약을 확대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방위산업체 노동자 쟁의권 제한은 불필요합니다. 헌법상 노동삼권은 제한의 방식이 아니라 “노동자는 단결·단체교섭·단체행동의 권리를 가진다”라고 단순히 규정하고 온전히 보장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타임오프 철폐**



ILO는 “노사 교섭이 가능한데도 의제 범위를 제약하는 법 조항이 있다면 없애야 한다”라고 판단합니다. 노조 전임자 범위·시간 등은 노사 교섭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합니다.

**노조법 2·3조 개정**



지난해 국회에서 파업 범위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노조법 2조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ILO는 결사의 자유 협약에 부합한다며 ‘환영’ 의사를 밝혔어요.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무산되었습니다.

**노조 회계공시 철폐**



ILO는 “정부가 아무 때나 노조 재정을 들여다보고 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결사의 자유 협약에 부합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입니다.

또한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해당 제도를 검토하고 노조 기능을 방해하지 않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라고 한국 정부에 요구합니다.